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양종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과장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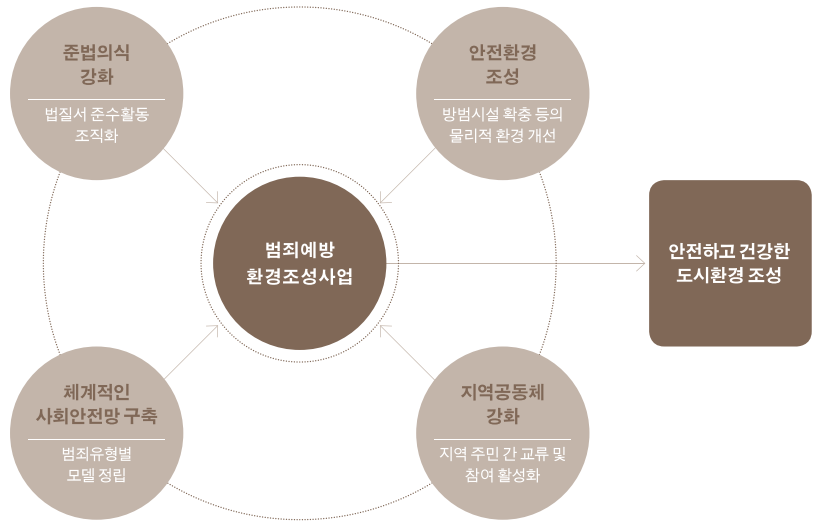
‘안전한 환경’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1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279.8%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실시한 ‘201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생활 속에서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4.5%에 달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법무부는 2014년부터 국민들의 준범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의 사업과 함께, 범죄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벌여 왔다. 이 가운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 개선을 통하여 범죄의 동기와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 간 소통 강화와 준법의식 향상 등 지역공동체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대화와 타협의 준법 문화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웃 간 갈등이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공동체의 범죄예방 역량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목적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법무부는 2014년에 14개 지역, 2015년에 11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 지역은 범죄에 특히 취약한 곳, 사업의 성과가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곳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특히 사업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4·201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지역 사업배경

2014년 대상지	사업배경
서울 마포구	·초등학생의 흡연, 폭력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 ·벽화작업 및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분위기 개선 필요
서울 노원구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수준 ·사업실행 가능성과 체감성과 창출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
서울 영등포구	·외국인으로 인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 ·민·관의 바람과 노력이 강함
부산 영도구	·마을 주변에 조성된 돌레길 안전 보호 대책 필요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대구 달서구	·굴다리 내 조명 및 벽면 낙후 ·벽면 분위기 개선 필요
광주 남구	·범죄피해 발생이 빈번한 전형적인 서민주거 밀집지역 ·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반 양호
대전 중구	·야간 시간대에 범죄발생 우려 높음 ·성매매업소 주변의 계도·순찰 활동 강화 및 음주소란행위 단속 강화 필요
경기 구리시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방치되는 공가가 급증 ·해당 지역에 CCTV 설치 및 관리 필요
경기 여주시	·여성·아동의 야간 통행시 불안감 야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세밀하게 수용하여 사업 추진 및 기획
충남 논산시	·등·하교 시 교통사고와 학교폭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학교·학생과 지역주민 간 관계개선 및 선도 프로그램과의 연계
울산 남구	·방치된 공·폐가의 수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불안감 감소 필요 ·지역 특성상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
충남 천안시	·학교 폭력 및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지자체의 참여의사가 매우 높아 사업 효과 기대
제주 제주시	·구도심 공동화로 낙후된 주택과 공가가 혼재되어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시적인 성과 예상
경기 부천시	·가스배관이 창문과 근접한 위치에 노출되어 있어 침입절도 가능성 높음 ·기존 시설 활용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높음

2015년 대상지	사업배경
경기 수원시 (매교)	·강력범죄 발생지(박○○ 토막살인사건) ·가로등, CCTV 등의 부족으로 범죄 취약지역 다수 존재
경북 포항시	·주민들의 높은 범죄 불안감 ·사업전락 및 계획의 타당성이 높아 사업종료 후 모범사례 창출 가능
서울 동작구	·대상지 범죄발생률과 기초질서 위반사례의 증가 추세 ·지자체, 주민, 경찰, 유관기관 등 지역협의체 구성 필요
전북 남원시	·구 남원역사의 유희부지와 역사 앞 유희가지역으로 인한 높은 범죄위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협의체 구성
경기 부천시	·명확한 지역 커뮤니티 운영계획
경남 창원군	·지역주민의 높은 범죄 불안감
경기 안산시	·2009년 다문화특구 지정 및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인해 사회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경기 평택시	·주거 쇠퇴지역으로 폭력범죄 다수 발생 ·경기도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서울 성동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노상범죄의 위험성이 높아 거리환경 개선 시급 ·CCTV, 비상벨 등 자체사업의 추진경험
경기 파주시	·거리 환경개선 시급지 ·담당공무원의 높은 전문성
경기 양주시	·공원 내 CCTV 파손, 화재 등 청소년 탈선행위 다수 발생

대상지의 문제점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서울 노원구)

대상지 문제점	- 필로티 주차장 범죄가능성 - 여성 범죄 노출 가능성	- 시장 인접 골목길 범죄 발생 - 시장 내 낮은 화소의 CCTV	- CCTV, 비상벨의 가시성 부족 - CCTV 부족 및 촬영범위의 한계 - 지주 및 적재된 쓰레기	- 골목길 사각지대로 인한 범죄발생 가능성 - 노출된 가스 배관으로 침입범죄 위험	기존 시설물의 미비한 관리
주요 사업 내용	1인 가구 맞춤형 범죄예방 - 무인 SS-폴 시스템 도입 - 무인 택배 시스템 도입 -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 실시	시장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 기존 노후화된 CCTV 교체 - 상인 자율방범대 추진	CCTV 신설 - CCTV 및 비상벨 설치 - 바닥 도색으로 영역성 부여 - CCTV, 비상벨 방향 표식 바닥 도색	주거지 가로환경 개선 노후화된 벽, 바닥 도색	기존 방범 설치물의 개선 및 관리 - 비상벨 설치 및 바닥 도색 - LED 보안등으로 교체 -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자료: 유광흠 외,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모니터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27.

서울 노원구의 경우 현황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인근에 재래 시장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1인 가구 대상 강력범죄 예방 및 시장 주변 절도범죄 예방'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절도 예방을 위한 시설 및 가로환경 개선, 방범시설 신설, 자율방범대 조직, 주민 상대 범죄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2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의 '깡이부리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 5개의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안전마을 사업'과도 연계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국민안전처는 '안전'의 관점에서 각 부처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총 12개 지역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2월 깡이부리마을, 법무부 - 국토교통부 MOU 체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업성과를 단기적인 결과만으로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사업 대상지 14개 지역 중 주요 9개 지역*에 대해 관할 지구대별로** 2015년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6개 지역에서 사업시행 전(2010~2013년 평균)에 비해 절도 범죄의 발생률이 평균 1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주민 비율이 사업시행 후 1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방법 시설물의 점검과 개·보수 주체가 불명확하여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 종료 후 관리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설치된 시설물들이 사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들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주민 간 소통 강화와 공동체의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 안전지역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러한 개별 사업 주체의 노력을 조화시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 낼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서울 마포구 도화동, 노원구 공릉 1동, 부산 영도구 청학 1동, 대구 달서구 상인동, 광주 남구 월산동, 대전 중구 유천 1동, 구리시 인창동, 여주시 흥문동, 논산시 부창동

** 사업대상지의 행정구역과 관할지구대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성과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사업 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3개 지역의 절도 범죄 증가율은 5.1%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조상규 외,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우리는 그동안 ‘범죄자의 처벌’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 왔다. 하지만 사후적 처벌보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예방 정책의 핵심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1 유광흠 외, 「법질서 실천운동을 위한 사례지역 계획안 작성 및 모니터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2 조상규 외, 「2014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 3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2015.